

담배규제기본협약 서명의 의의



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5월 21일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지난 5년간 협상과정을 거쳐온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30여 년간 보건학 교수로서 재직해온 본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7월 21일 UN 본부에서 역사적인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WHO총회에서의 인준은 흡연의 피해를 이제 온 세계가 함께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50년대 이후 대규모 질병역학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흡연의 건강적 피해는 지금까지 어떤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 만일 현재 세계 각국의 흡연실태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지금 연간 약 400만명에 달하는 흡연관련 사망자가 2030년에는 무려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흡연에 의한 각종 암 사망이 전체 암 사망의 1/3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심혈관계질환이나 폐질환 등 거의 모든 질병발생에 흡연이 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갖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는 이제 담배규제 정책이 결코 개별국가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은 지금까지 금연대책에 소홀했던 개발도상국들을 독려하는 데 모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에 고무된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 정부대표들이

강력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1970년대부터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실시하여 성인남자 흡연율을 20~30%대로 크게 낮춘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성인 남자의 절반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장차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가격 및 담배세의 조정, 흡연구역의 제한, 담배포장의 규격 및 명칭의 제한, 경고문의 표시, 담배성분에 대한 규제 및 공개,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제한 및 흡연자의 금연 유도 등 흡연의 감소 및 흡연으로 인한 피해 감소 방법들을 각 법조문으로 구성하여, 이 법을 실행할 경우 흡연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래 간접흡연의 방지, 담배광고의 제한, 청소년에 대한 흡연 예방 사업, 흡연자의 금연 유도 등 꾸준히 금연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던 담배사업도 지난해부터 민영화되어, 정부가 그 동안 소홀히 했던 금연운동에 한 걸음 나서기 시작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WHO총회 인준과 발 맞추어 200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금연종합대책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하며, 특히 청소년과 환자의 출입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물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여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흡연자들의 금연 유도를 위하여,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담뱃갑 포장지의 흡연 경고문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담배판촉 행위를 제한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담배판매 감시와 흡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담뱃값의 인상과 금연구역의 확대 등 더욱 강력해진 금연정책으로 흡연자의 불편이 커짐으로 인한 불만은 있지만, 흡연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에서의 높은 담뱃값과 철저한 금연구역 확대정책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이종욱 신임 사무총장은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제보건의료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담뱃값을 올려 줄어드는 세수보다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밝히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WHO총회에서의 인준은 흡연의 피해를
이제 온 세계가 함께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 '담뱃값 인상을 이루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잡히는 꼴'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뱃값의 인상, 흡연구역의 제한, 담배 판촉행위의 제한 등 다각적인 금연 노력은, 흡연자들에게 일시적인 불편을 주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일이 결국 국민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길인 점을 생각할 때 국가의 금연정책은 실상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윈-윈(win-win) 정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흡연실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